

의정소식

구민 복리 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심 없이 발로 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용광로(이영철, 2019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복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 제183회 임시회
 - 제184회 임시회
 - 제185회 제2차 정례회
- 13 주요 안건처리 현황
-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21 현장 속으로
- 27 결의안, 5분 자유발언
- 40 2019년 하반기 포토 의정



표지설명 | **격동의 화암 주상절리**
(이경호, 2019 복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발행일 | 2019년 하반기, 제23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복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복구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3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발간사



구민 여러분을 위한 발걸음을 심 없이 옮기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이주언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북구의회는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발판으로 북구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속에서도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늘면서 22만명에 이르러 더 큰 성장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우리 북구가 울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뜻하며, 앞으로의 발전 여지도 그 어느 곳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청과 의회가 할 일 또한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구 출신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의 훈격 상향과 광역전철 송정역 연장 운행, 강동권 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안들을 해결해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우리 북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북구의회는 올해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의정,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투명하고도 걱정하게 구정이 운영되도록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발 더 다가가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집행기관과 손발을 맞추어 오로지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야의 구분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해서 결정하는 ‘협치의회’, ‘소통의회’를 구현해 전국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우리 북구에 걸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심 없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북구의회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주언

☐ 제7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장



성 명 **이주안**
 연락처 010-9173-443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든든한 의정활동을 펼쳐 기분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의장



성 명 **백현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늘 그랬듯이 이웃 같은 구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임채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구민이 최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



성 명 **박상복**
 연락처 010-8630-4918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2020년 1월 15일 사직

의원



성 명 **정외경**
 연락처 010-6625-7725
 선거구 **농소 2·3동**

초심, 열심, 지심으로 더 많은 행복을 만드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성 명 **이정민**
 연락처 010-3123-3387
 선거구 **농소 2·3동**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 명 **임수필**
 연락처 010-6227-0049
 선거구 **농소 2·3동**

노동자 서민의 직접 참여정치가 희망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 명 **이진복**
 연락처 010-4228-8986
 선거구 **비례대표**

구민의 이익을 지키며, 겸손하고 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 의원정수

| 계 |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 비례대표 |
|---|----------------------|--------------------|---------------------|------|
| 8 | 2 | 3 | 2 | 1 |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복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의회 조직



2019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회기운영 현황(2019. 7. 1. ~ 12. 31.)

| 구분 | 계 | | 임시회 | | 정례회 | |
|-----------|----|----|-----|----|-----|----|
| | 회수 | 일수 | 회수 | 일수 | 회수 | 일수 |
| 2019년 하반기 | 3 | 49 | 2 | 18 | 1 | 31 |

안건처리 현황

| 회수 | 일수 | 계 | 예산안 | 결산 | 조례안 | 동의안 (승인) | 결의안 (건의안) | 보고 | 질문 | 5분 자유발언 | 기타 |
|-------------------------------|----|----|-----|----|-----|-------------|--------------|----|----|------------|----|
| 제183회 (2019.8.26.~9.9.) | 15 | 23 | 1 | 0 | 7 | 2 | 1 | 0 | 0 | 4 | 8 |
| 제184회 (2019.10.15.~10.17.) | 3 | 13 | 0 | 0 | 8 | 0 | 0 | 0 | 0 | 0 | 5 |
| 제185회 (2019.11.20.~12.20.) | 31 | 31 | 4 | 0 | 14 | 1 | 1 | 0 | 0 | 4 | 7 |
| 합계 | 49 | 67 | 5 | 0 | 29 | 3 | 2 | 0 | 0 | 8 | 2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3회 || 임시회 2019. 8. 26. ~ 9. 9.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8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이동권 구청장 등 복구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8명 전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발언대에 오른 임채오 운영위원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제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반하며 양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과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지정 취소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양국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농단하려는 아베 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히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노재팬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주언 의장은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상반기 구정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구정 운영 방향을 살필 기회"라며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복구를 보다 풍요롭게 가꿀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동료 의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이정민 의원은 '달천철장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복구 관광자원화를 역점 추진하자'를 주제로, 박상복 의원은 '울산복구, 꽃 단지 조성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이진복 의원은 '역사문화 전통을 발판으로 복구형 관광 중심지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이주언 의장은 9월 9일까지 이어진 이 임시회에서 '복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4회 || 임시회 2019. 10. 15. ~ 10. 17. (3일간)

울산북구의회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북구의회는 첫날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회기 이틀째인 16일에는 개별 의정활동을 펼친 뒤 17일에는 현장방문 활동에 나섰다.

현장방문을 통해 박상진 역사공원, 기박산성, 신흥사, 유포석보를 차례로 둘러보면서 이동권 북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사벨트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5회 || 제2차 정례회 2019. 11. 20. ~ 12. 20. (31일간)

울산북구의회가 11월 20일 2019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제185회 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12월 20일까지 31일간 펼쳐진 이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16건의 조례안도 심의했다.

북구의회는 첫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동권 구청장은 총 3천734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도시의 균형발전, 함께 하는 희망 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언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규정 전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보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배분토록 하고, 불용 예산이 없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북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은 구청 각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12월 2일부터는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의정역량강화

선진의정 구현을 향한 운영사례 연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민주의정연구회



북구의회 민주의정연구회, 한삼건 교수 초청특강

2019. 10. 22.

울산북구의회의 의원 의정연구모임 ‘민주의정연구회’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대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부 학부장인 한삼건 교수를 초청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한삼건 교수는 10월 22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이주언 의장, 임채오 운영위원장, 정외경, 이진복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의정연구회와 북구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울산 북구의 역사와 도시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근대 이전의 북구와 최근의 북구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지형과 현재의 지형, 북구 각지의 유적, 신라와의 관계, 달천철장·염포·효문 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북구지역 도시계획 현황 등을 함께 짚어봤다.

한삼건 교수는 “북구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개통과 외곽순환도로 착공 등의 강점과 기회 요인이 있다”면서 “아파트 중심의 허약한 도심 구조와 도시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그린벨트, 노후한 산업단지 등의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언 의장은 “북구지역 도시 개발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의 도심 형성 및 주거환경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강연”이라며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 충격에서 회복을 위한 재난 심리 복구의원 워크숍

2019. 11. 11.(월) 울산광역시 복구 의정연구회



복구 의정연구회, 재난심리 워크숍 개최 2019. 11. 11.

울산복구의회 의원 의정연구모임 ‘울산복구의회 의정연구회’가 11월 11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재해 충격에서의 회복을 위한 재난 심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연구회 대표인 임수필 의원과 임채오, 정외경, 이진복 의원, 그리고 복구청 안전정보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사회공헌 정신건강심리센터 문정민 대표원장이 강사로 나서 △재해 심리학의 이해 △재난 심리 반응 △재해 리더십 △재해 충격에서 회복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수필 의원은 “지진과 핵발전소 및 사회적 재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주민들의 심리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지식으로 정리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183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구지역자활센터취득(변경)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박상복 의원 외2]
 - * 북구의회에 입법고문과 더불어 법률고문의 위촉 및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각종 안건 심의나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과 의회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임수필 의원 외3]
 - *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북구 예술 창작소 추가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 창작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가 2020년 6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창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인프라 강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구민 생활 및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복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청취 건 ▶ 원안가결

* 관내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중산동 이화 및 화정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이화·화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및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임채오 의원 외기]

*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협하고 한·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치이며, 이에,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결의함.

●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이주언 의원 외기]

*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안과 관련하여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 대신에 폐교 예정 학교를 교체하거나 통폐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승인 조건 변경의 건이 통과되도록 촉구하고자 건의함.



의회

제184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원안가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민관 합동 혁신으로 지역갈등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문 및 협의기능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로 목적, 기능상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 상설화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0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
-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8. 6.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구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 기획·예산, 고충 민원 처리, 전략사업 추진,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관제 도입과 부서 신설·폐지 등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결
 -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부지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을 거주여건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등)까지 확대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2020년도 울산광역시 복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 **울산광역시 복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80%)에 비해 우리 구는 40.8%(2018년 기준)로 현저히 낮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매년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동복지 향상과 관련한 각각의 조례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보건소 수질검사시험 관련 수수료 미반환 규정이 국민권익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미반환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임수필 의원]**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이정민 의원]**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함.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이진복 의원]**

*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기준의 현실화, 보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특히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에 대한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함.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① 목 적

2019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②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③ 감사기간 : 2019. 11. 21. ~ 11. 29.(9일간)

④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감사대상부서 | 계 | 시정요구사항 | 건의사항 |
|--------------------------|----|--------|------|
| 계 | 88 | 14 | 74 |
| 공 통 사 항 | 2 | 1 | 1 |
| 기 획 홍 보 실 | 4 | 1 | 3 |
| 주 민 소 통 실 | 5 | 2 | 3 |
| 행 정 지 원 국 (행정복지센터 포함) | 19 | 2 | 17 |
| 복 지 경 제 국 | 25 | 5 | 20 |
| 안 전 건 설 국 | 20 | 3 | 17 |
| 보 건 소 | 6 | 0 | 6 |
| 문 화 예 술 회 관 | 3 | 0 | 3 |
| 시 설 관 리 공 단 | 2 | 0 | 2 |
| 의 회 사 무 과 | 2 | 0 | 2 |



-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

구분

주요질의사항



백 현 조 부의장

주민참여예산제 전환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동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와 연계한 참여예산제 운영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투명하게 전자투표, 온라인투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 방식 변화가 필요함.

청소년 지원 확대

-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및 정책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각종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드게임 카페 같은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주기 바람.



임 채 오 의원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

-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고, 사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결과가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구축 중인 과정에서 복구만의 모델 창출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구에서는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동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전담팀은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힘써 주기 바람.



박 상 복 의원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 사업 시 역사적 고증 필요

- 기박산성에 대한 역사적 논란이 있는데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반드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역사적 고증작업도 병행하여 추진 하기 바람.

질 높은 일자리 조성

- 일시적·일회성의 일자리가 아닌 연속성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고민해 주고, 향후 친환경자동차 사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부품생산 기업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정 위 경 의원

울산쇠부리축제 장소 이전에 따른 준비 철저

- 내년부터 울산쇠부리축제 장소가 달천철장으로 이전해서 추진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인근 상가,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도시농업 등 활성화

- 농촌그린투어 견학은 타구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고, 체험 농장 외에도 계절별 우리 지역 농가 위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학과 주말에 청소년 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구분

주요질의사항



이정민 의원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 내실화

- 미세먼지 감축 및 지구온난화 해결 대책은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땅히 노력하여야 할 과제로서 관련 교육 확대, 그린리더 활동 내실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 발굴 등 지속해서 노력해 주기 바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속적으로 관리 철저

- 최근 언론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역에는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과 적발사례는 없으나, 학대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



임수필 의원

아동권리증진 노력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을 향후 아동권리대변인단 구성 등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해 주기 바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대응 등 방사능방재 업무추진 철저

- 경주(월성원자력)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는 경주시내보다 북구가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및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바람.



이진복 의원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 철저

- 화재취약대상이 입소나 생활하는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의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특히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기 바람.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 어린이 급간식비가 10년 전 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데 현실화 및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구에서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7대 개원 1주년 행사 자원봉사로 훈훈



제7대 울산북구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7월 10일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국공립 장애전문 해밀어린이집을 찾아 ‘개원 1주년 기념 의원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보육교사도우미로서 반별로 배치돼 교사,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기와 그리기 등을 진행 하고, 미끄럼틀과 장난감을 활용하면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별도로 유기농 과자와 음료 등의 간식도 전했다.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첫 등원 때의 초심을 되돌아 보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준비했다”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 아이 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오히려 큰 힘을 얻어간다. 2년차에 더 열심히 활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쓰는 이곳 관계자들의 노고를 잘 알게 됐다”며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범죄 꼼짝 마” 연암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울산 북구의회가 연암자율방범대와 함께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순찰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암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매일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7월 15일 밤 연암자율방범대와 함께 LG진로아파트, 화봉사거리 일대를 돌며 야간방범순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방범대 대원들과 함께 연암동의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구 곳곳을 순찰하면서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펼쳤다. 연암자율방범대 대원들과 간담회도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주언 의장은 “주민의 안전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애쓰시는 연암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방범활동에 동참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들은 방범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북구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석에 소외되는 곳 없도록” 명절 위문활동



울산북구의회 의원 전원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9월 9일 공립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 센터와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이 운영하는 메아리동산을 찾았다.

추석을 앞두고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도록 돕기 위해서다.

방문단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쌀과 복사용지,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도 양 기관에 전달했다.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은 “모든 이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이웃들을 찾았다”면서 “즐거워야 할 명절에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돌보려 한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이웃들을 격려하고 있다.

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서 배식 봉사



울산북구의회가 2019년도 4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활동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0월 17일 울산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어르신행복식당’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급식 배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각자의 배식코너에서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차질 없이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원했다.

이주언 의장은 “어르신들이 즐겁게 식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 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매 분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올해도 재활용품 수거활동, 자율방범활동 및 학생 통학 지도, 보육교사도우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박산성·신흥사 등 역사벨트 사업지 방문



울산북구의회가 10월 17일 북구 역사벨트사업 대상지인 박상진 역사공원과 기박산성, 신흥사, 유포석보를 차례로 찾는 현장방문활동에 나섰다.

의원들은 먼저 박상진 역사공원을 방문해 산책로, 조경 및 잔디, 담장, 고택건축물, 교육장 및 관리동 등을 점검했다.

이어 기박산성, 유포석보, 신흥사 등을 찾아 울산 북구청의 '역사 벨트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을 확인했다.

북구청은 이들 임진왜란 관련 유적지를 하나로 묶어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 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언 의장은 "기박산성과 신흥사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울산을 대표하는 호국정신이 깊이 서려 있는 지역"이라며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북구관광 활성화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8개동 나눔냉장고에 사랑 듬뿍 진열



울산북구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기부문화도 확산하기 위해 12월 27일 북구청 광장에서 ‘연말연시 나눔냉장고 물품 전달행사’를 열었다.

북구의회는 앞서 라면 24박스과 떡국용 떡 80kg 등 약 90만원 상당의 식품을 구매했고, 이날 북구청 복지지원과에 이를 전달했다. 식품들은 북구 각 동에서 운영 중인 나눔냉장고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식품을 기부하면 어려운 이웃들이 이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나눔냉장고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나눔냉장고는 북구가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으로 8개 모든 동에서 운영 중이다.

이주언 의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자칫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 있어 걱정”이라며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게 행복과 사랑인데, 우리 구에는 동마다 나눔냉장고가 마련돼 있어 나눔 실천이 어렵지 않은 만큼 구민들의 아낌없는 나눔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결 의 안

(건의안)

> 발 의 자 : 임채오 의원 외7
> 의 결 일 : 제183회 임시회(2019. 8. 26.)
> 결의요지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가.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함.

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협하고 한 · 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치임.

다.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공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라. 이에,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결의함.

■ 주 문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 · 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업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공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월 5일 열린 울산지역 5개 구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일본 자매 · 우호 도시의 교류 전면 중단 및 시민들의 노노재팬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도 22만여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과거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 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 국가 지정 취소 조치 등의 부당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역사적 과오를 덮어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경제를 농단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오만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냉정하고 강경한 맞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22만 북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노재팬운동에 우리 북구의회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결 의 안

(건의안)

> 발 의 자 : 이주언 의원 외7
> 의 결 일 : 제183회 임시회(2019. 9. 9.)
> 결의요지 :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 제안이유

가. 지난 4월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 설립 당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행이 어려운 사업의 조건 해지를 위한 승인조건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협의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변경계획을 요청 건의 하였으나, 조건 변경 불가로 통보됨.

나. 도시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북구는 10년 사이 홀로 인구 증가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개교예정 신설 학교 주변은 대단위 택지개발이 한창이어서 교육부의 승인 조건 이행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임.

다. 이에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안과 관련하여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 대신에 폐교 예정 학교를 교체하거나 통폐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승인 조건 변경의 건이 통과되도록 촉구하고자 건의함.

■ 주 문

우리 북구의회는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관내 3개 중·고등학교 신설안과 관련하여,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 대신 폐교 대상 학교 교체 또는 학교 통폐합 기한을 연장하는 승인 조건 변경건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22만 구민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북구는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지역산업의 발 빠른 성장과 아울러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성장거점 중추도시로 육성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2020년 3월,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학교 3개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개교예정 신설 학교주변에서는 7개 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이 한창이고, 울산광역시에서 북구만 유일하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16만 8천명에 비해 2019년 7월 인구가 21만 5천명에 이르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만 1천명이 증가하였다.

개교 예정학교 주변에는 호계매곡지구(제2 호계중) 11,125세대, 강동지구(강동고) 6,166세대, 송정지구(송정중) 7,821세대가 한창 입주 중에 있어 인구의 증가는 더 빨라질 것이며, 교육 수요와 교육환경 등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신설로 인해 폐지가 지정된 학교 주변 역시 공동주택과 인접하고 주택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지가 이뤄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은 교육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추진은 사실상 불가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육부가 백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교육의 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학교신설 조건부 이행을 위해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기존 학교를 폐지하는 것 또한 우리 22만 구민들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북구 주민 22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울산 북구의회의 교육부에 대한 결의>

하나, 울산 북구의 신설학교 승인 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하나,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를 개정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

결 의 안

(건의안)

> 발 의 자 : 이진복 의원

> 의 결 일 : 제185회 제2차 정례회(2019. 12. 16.)

> 결의요지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 제안이유

가. 현재 떨어지는 출산율, 높아지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필요함.

나. 무엇보다도 저출산율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정책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다.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임.

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강력히 촉구함.

■ 주 문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높아지는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율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육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재 정부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기준은 수년째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다.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 기준이 1,745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11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하여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정부 기준액으로 인하여 지자체별 지원액은 제각각이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에 유아1인당 1만원지원(하루 500원), 울산남구는 유아1인당 하루 100원 지원, 울산중구는 어린이집 개소당 5만원(하루 40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하루 6,391원으로 어느 지자체, 공공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급간식비의 차별을 키우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급간식비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북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라.

하나, 울산시는 울산의 구군별 급간식비의 차별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울산북구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발언일시 : 제183회 임시회(2019. 8. 26.)
> 발언요지 : 달천철장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북구 관광자원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자.



달천철장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북구 관광자원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자.

기록에 의하면 우리 북구의 달천철장에서 삼한시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2,000년 동안 철이 생산 되었으며 달천철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무역거래가 있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기문화를 선도했던 이 곳 달천철장의 쇠부리 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 제철기술을 복원하여 우리의 철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달천철장의 역사적 보전가치와 북구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획기적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달천철장은 당시 유일한 토철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철 문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귀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산들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방치해 왔고 달천철장의 철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몇 해 전부터 쇠부리 복원 사업단도 생겨나고 당시의 철 생산 과정들을 재현한 쇠부리 축제를 전국단위 축제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우수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늦은 감은 있지만 알려 나가고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당시의 제철기술을 복원하는데 행정력과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쇠부리 공원과 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장을 빨리 완공하여 우리 북구만의 소중한 관광자원화를 일궈야 합니다. 국내외 철 문화 학술단체들이 직접 달천철장을 찾아와서 학술세미나는 물론 철 문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달천철장 컨벤션센터 건립도 지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앙의 문화 재청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현재의 북구의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구청장께서 집권당 소속이기에 제대로 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울산시 그리고 정부 단체와 업무 협조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예산 확보와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제정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달천철장 주변의 SOC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울산북구, 꽃 단지 조성의 성공을 위한 제언

울산 북구는 도심지 내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 및 관리, 구민 정서함양 기여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꽃과 정원이 되는 도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 유휴 공간과 주택, 공원, 가로변 등에 꽃을 심고 가꾼다는 계획인데 지역 공한지 곳곳을 꽃으로 채우는 명분에 반대할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농소운동장 입구에 해바라기가 피었고, 시례잠수교에 코스모스가 주민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5년간 15억 이상의 주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도시 꽃 단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지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1대10대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명 페덱스 이론으로 품질경영 부분의 교과서와 같이 인식되는 법칙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설계나 기획 단계에서 즉시 고치는 데는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 잘못을 숨기고 진행하게 되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 손에 들어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설계, 기획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불량 및 결함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최선임을 증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만큼 세밀한 계획이 중요하므로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북구는 기존 건설과의 경우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꽃 단지 조성에 맞게끔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부서별로 36개 과제 3억 가까운 예산으로 실행 중입니다. 꽃 심기가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몰라도 재해, 재난 관련 예산편성이나 국가 또는 시(市)로부터 받은 교부금의 조정 등의 사안이 아님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나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단체장의 공약 사항이라 해서 비용 편익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혈세(血稅)를 집행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꽃단지 조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농수산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분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수산과의 존재 이유는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로 농업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반면

에 공원녹지과 목표는 도시공원 디자인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이며 공원 가꾸기, 녹지 공간 조성, 도시공원 만들기 등의 주요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꽃단지 조성 추진 업무가 농수산과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나 공감대도 없습니다. 부서간 이기주의인 '사일로(Silo)' 현상을 없애는 방법 중에는 조직원이 서로 인정하는 업무 분장을 시행하는 것인데,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원과 외부 이해자가 동의가 되어야만 권한이 생기고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수반되는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농수산과에 업무를 추진하려면 농민의 수익증대 사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구청이 직접 화초 육성 등의 기능을 가진 양묘장을 운영하거나 지역 화훼 농가의 화초를 직접 구매하는 것일 겁니다.

북구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대학을 운영 중인데 구청 양묘장에서 필요한 지식 및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여 은퇴자를 교육 후 고용하는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꽃단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인원과 조직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풀베기 및 잡초제거임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도시 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풀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다던지, 도로변 풀을 피하고자 차도로 다니는 등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입니다. 주민을 동원에 꽃을 파종하고 심고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꽃 단지라는 이름으로 공한지에 조성된 곳이 잡초 밭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거진 잡초 사이에 간혹 꽃이 보이고, 토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꽃을 심다 보니 더운 여름에 꽃이 말라 죽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흉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잡초제거, 물주기, 주변 정비 등의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꽃뿐만 아니라 다년생으로 관리되고 녹음을 느낄 수 있는 나무 심기를 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꽃은 자주 물을 줘야 하고, 주변 풀 제거 등 관리가 까다

로운 만큼 꽃을 키우기 어려운 곳은 나무로 대체, 병행하여 도시를 가꿔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북경에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경에는 학자수 나무라 불리는 회화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회화나무는 미세먼지 흡착이나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꽃이 피는 시기가 진사 과거시험이 있는 음력 7월이라 재물과 관(管)운을 상징한다 해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가로수였습니다.

이렇듯 나무나 꽃에 지역 향토 문화나 설화 등 스토리를 가미해서 복구를 상징 할 수 있는 꽃 단지 조성토록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한지 자투리 땅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대형화되고 규모 있는 꽃단지 조성 역시 필요하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꽃이 정치인에게 비유되는 말 중의 하나가 '권불사년(權不四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입니다.

사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듯이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화려하여, 그 화려함에 눈이 멀고 귀를 닫아 제대로 주민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혼돈 할 수 있습니다. 꽃이 먼저인지, 소방도로가 우선인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인지 등 우선순위에 정치인의 신념 외 과학적, 법률적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이 올바른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판단과 전문가인 공무원의 판단이 균형을 이룰 때 공익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중 삼중으로 비판하여 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을 원안 가결이 아닌 주민의 혈세를 생각하여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복구 꽃 단지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치인과 과학적 판단을 하는 행정이 가시적 성과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함께 깊이 있는 설계를 고민해 주길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3회 임시회(2019. 8. 26.)

> 발언요지 : 역사문화 전통을 발판으로 북구형 관광 중심지로 만들자!



역사문화 전통을 발판으로 북구형 관광 중심지로 만들자!

지난 6월 14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울산 북구 방문 시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 방안 등을 직접 요청하였고, 북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승을 위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이상헌 국회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되고 있던 강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발의된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동권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은 물론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역사적으로 문화의 고장이며 고현 박상진 의사, 구충당 이익립 선생 그리고 효자 송도선생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기박산성 역사공원조

성과 더불어 유포석보, 유기봉수대, 신흥사, 달천철장을 연결한 역사벨트화사업을 계획하고 북구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작업을 통해 선사 청동기문화 중산리 고분군, 고인돌, 관문성, 염포동 소금포, 정자항 미역바위 등이 어우러지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달천철장의 광산복원과 관련해서 민·관·산·학의 협업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관과 영상콘텐츠 등의 개발을 통해 북구 지역이 대표적인 한국의 철 생산의 중심이었음을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민·관·학이 주도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산업화와 첨단기술의 접목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안과제로서, 복구는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개발과 이색적인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며 복구의 관광문

화 자산을 차별화하여 국내·외에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동개발과 관광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 발언일시 : 제183회 임시회(2019. 9. 9.)
- > 발언요지 :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공정세대 청년들의 자존감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공정세대 청년들의 자존감

기초의회는 정치권에서 논하는 이념논쟁과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있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추석 인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의 울분을 담아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생산, 부품소싱, 투자검토 등 업무를 위해 남미의 파라과이부터 유럽의 독일까지

50여개 국을 다녀왔습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자랑스런 정치인들의 선택이 오늘날 뉴욕 지하철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볼 수 있고, 모스크바 시내에서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끌어 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허나, 지금의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나의 조국은 조국이란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으로 인해 진영논리로 정의가 갈리고 공정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범죄는 지식층의 반칙, 특권층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유체이탈법에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실망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자존감이 패대기쳤다는데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가슴 뭉클했던 청년들이 지금 대학가, 거리에서 가슴속에 분노를 집회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사회공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논쟁을 제외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촉발한 것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점 특혜 아니었습니까? 학사 비리가 청년층부터 부모 세대까지 ‘이게 나라냐’의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당시 반칙과 특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없기를 바라면서 촛불을 든 청년세대의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지나친 이념 정책과 무능으로 경제의 각종 지표는 하향곡선이 되었고 안보는 위태해졌으며 외교는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 운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펀드문제, 사학 비리 등 가족사기단의 모습을 의혹이 있더라도 국민들은 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자녀의 입시 특혜는 국민의 정서 가장 예민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린 꼴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필기시험한 번도 안보고 갈 수 있는 신통방통한 진학스토리는 뒷

배 없는 학부모에겐 상실감을 주었고 일부 특권층이 반칙으로 기득권을 유지한 민낯을 드러내었습니다.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에 복직했다’ 이는 조국 자신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에 의해 수많은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데 자신의 말대로라면 탄핵당한 꼴이다. 하지만 그는 ‘의혹만으로는 사퇴가 안 된다. 국민정서상 괴리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 중생황에 취해 버렸습니다.

그 많던 개념 연예인은 진영 논리 속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조국 후보자는 국민의 정서에는 도덕적 실행자일 뿐이다. 남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 관대하려면 정치, 공직자가 아니라 좌파사상가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자신의 흥결에 감수성이 무너지더라도 내편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은 사회를 더욱 불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에게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같은 편에겐 너무도 자애로운 기준을 말하는 것이 과연 좌파 정치이고 진

보정치 입니까? 청년들은 절차적 불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실력과 노력에 걸맞지 않은 불공정한 결과에 대해 용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조국은 수사의 대상일 뿐 개혁의 대상이라고 자신을 포장해선 안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기편끼리 특별한 기회, 특별한 과정, 특별한 결과를 누리는 집단에 대해 미래의 공정 세대인 청년들이 보수, 진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잡아주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제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성장시켜온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저력을 마음껏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청년들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 발언일시 : 제185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0.)
- > 발언요지 :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국민보편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국민보편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 곳곳에서 작년보다 못하게 예산이 깎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재정 상황이 힘든가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 살림살이도 힘들어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민족의 이익과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 서서 미군이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반대합니다. 미국은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에 약 6조원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분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1조389억원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미국이 재정주권을 침해하고 강압으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에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보면 ‘미군부대가 사용할 토지는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는 미국이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천문학적인 미군기지와 시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시기에 주둔비용까지 덤으로 내게 된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1991년부터 만들어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때문입니다.

협정 초기에는 1천여억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천억이상 늘어나다가 올해 분담금은 1조3백8십9억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오직 일본과 한국만이 내는 부당한 비용입니다. 필리핀은 미군에게 기지를 빌려주면서 오히려 기지사용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10월 초 한 보수신문에 게재된 칼럼의 내용입니다.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트럼프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 일화를 소개하며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 (15만이하)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허풍을 떨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10억 달러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한 데 대한 자화자찬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아파트 월세에 비유한 것은 참기 힘든 모욕이다. 미국은 집주인이고, 한국은 세입자란 소리 아닌가. 아무리 악랄한 집주인도 한 번에 집세를 5배로 올리라고 요구하진 않는다. 한국을 호구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요구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권국가의 지방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이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택에는 10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 '세계 최고의 휴양지 수준의 기지를 만들면서 평평 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야구장과 소프트볼경기장, 18홀 골프장, 국제 경기수영장, 워터파크, 볼링장, 영화관, 쇼핑몰 등 수많은 편의 복지시설이 있어 미군들은 세계미군기지 중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주한미군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얻고 미군의 목욕비, 전기 세탁, 폐기물 처리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는 근거로 새로운 항목들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주둔경비와도 무관한 전력자산 운영비용과 작전지원 항목,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써도 묻지도 못하는 비용, 한반도에 불안을 조성하는 비용 등이 우리의 국민들 세금으로 쓰여 평화를 해치게 해서 안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혈세로 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이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한미간 특

별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지소미아 종료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시점에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음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줄여야 합니다.

북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우리 북구의 적은 예산으로 온갖 민원에 시달리며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의 쓰임을 잘 아시는 해안을 가진 전문가이시니 6조란 돈의 규모를 잘 아실 것입니다. 6조원이면 아동수당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기초연금 2배 이상, 농민 240만명에게 월20만원의 농민수당, OECD평균 장애인 예산 확보,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청년수당확대, 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켜 학자금과 배우고 싶은 요구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예산과 통일부 예산이 이제야 겨우 1조원이 조금 넘는 시기이며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울산광역시 예산이 3조6천억원입니다.

각 광역시 지자체 마다 500억씩 나눠준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북구의 보편복지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동네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마더센터,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일자리, 취약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원, 중소기업체와 중소기업인들 지원 등 우리 사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민생복지에 쓰인다면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 살림이 팍팍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맞이해도 자주국방의 예산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예산에 대한 결정은 우리 정부만이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천문학적인 혈세를 우리 국민, 국회, 정부의 뜻에 어긋나게 근거가 확실치 않은 곳에 협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자주재정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군에게 지출되는 수조원의 비용은 이제 우리의 삶은 바꾸는 보편적 복지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서민이 근심 걱정 없이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5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0.)
 > 발언요지 : 조삼모사식 복구 행정기구 개편에 반대한다.



조삼모사식 복구 행정기구 개편에 반대한다.

복구청은 '기획조정실 신설 등을 포함'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당시 현실적으로 실장을 누가 담당할 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설되어 야심차게 출발하는 조직인 만큼 구청장님의 기대와 사업달성 목표가 있을 진데, 담당리더가 리더십에 대한 흥결이나 노조, 외부 사회단체들의 반발 없이 업무 역량을 발휘하여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급히 기획조정실을 없애고 일부 부서를 부구청장 직속체제로 개편하였지만 이 조직도 역시 단기 6개월짜리로 존재 되는 게 아닌지, 이에 대한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안을 접하면서 개편 조직의 규모가 직원의 역량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기업체들도 조직의 규모가 직원의 역량을 누르면 조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망함을 알기에 조직의 규모와 직원 역량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복종 통제에 맞춰졌던 조직을 대수술하여 수평적 문화로 바꾸거나, 보고서 축소, SNS 보고 등 다양한 시도로 조직이 비대해져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에, 시발점이 컨트롤 타워의 축소와 일할 수 있는 현업 사업부서의 보강이 그 트렌드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삼성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없애고 본사 기능을 강남에서 수원으로 이전 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기획조정실과 기획실 역할을 축소하여 각 사업부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의 포춘지 500대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과감히 권한 이양을 통해 사업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복구청은 현업사업부서보다 전략사업담당을 두고 소위 현업부서에서 말하는 옥상옥, 현업부서 빨대 조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설되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공모사업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직접 공모사업을 수행하여 예산을 확보할 지 아니면 해당 현업 부서로 업무를 F/UP

만 할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4개 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대한 스크린이나 부구청장의 업무 과중, 타 부서에 비해 상위 부서의 역할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둘째, 현 국회의원부터 선출직 의원들이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 없는 멘트는 아닐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로 되면서 기존 관광개발해양과의 계가 축소됩니다. 동구의 경우 우리와 유사함에도 실금으로 해양관광정책실을 두어 전문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복구의 방향은 어떤지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 관광, 체육 세 분야가 하나의 별도 부서가 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업무량일진데 한 부서의 과장께서 담당한다는 것은 업무량 증가가 뻔한 사항입니다. 체육만 보더라도 봄, 가을 체육 시즌에 주말도 없이 항상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과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항상 체육회는 별도 조직이라고 대답 하면서 체육회장의 의견을 위해 주말을 희생하는 사항 역시 제고 되어야 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을 진데 어디에 전문성을 두고 의사결정을 고민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 한 번 미래의 먹거리를 관광이라 하는 말이 영혼 없는 멘트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셋째, 단순히 당초 예산 편성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각 동의 일선현장에서 민원해결 및 복지 사각 지대를 줄이고자 온 몸으로 고생하는 사회복지 계열에 대한 승진 및 예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서의 업무 강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관 승진 요건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수 계열인 사회복지직이 동구, 중구, 울주군에 5급 이상이 각 1명, 울산시에는 5명이 근무 중입니다. 과연 우리 복구는 어떤지 되물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입학 전 그리고 퇴임 이후의 구민 교육 및 케어에는 가족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등의 지원 담당이 있으나 유치원 입학에서 청·장년층까지에 대한 평생교육 케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 회사 등의 타 조직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구민을 위해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서관과 일 것입니다. 도서관과 역시 중앙도서관을 필두로 전문직 개방형 공채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고민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주민소통실 신설, 북구문화예술회관 전문개방형 공채 등으로 기존과 다른 조직 구성을 시행 중입니다. 주민과 더 다가가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통해 주민의 문화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 공감되듯이 도서관과도 중앙도서관을 메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소 운영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니즈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은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바로 내부구성원간의 합의가 그 출발입니다. '개인이 조직을 이길 수 없다' 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집결된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관습화 되고 문서화 되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의사소통을 위해 "올바른 의사소통은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통의 결과를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민을 위해 조직을 바꾸고 업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소통의 시작이 조직 변경이기에 부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럴듯한 명분으로 조직 변경안을 제시하는 조삼모사식의 개편이 아니라 참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로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는 쉽고 명확한

메시지가 오가야 하는데 이 점이 부족하여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5분 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 발언일시 : 제185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0.)
- > 발언요지 :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 스스로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복지서비스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동을 거점으로 일반 동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성공을 위해 중심 동의 동장은 일반 동의 동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례 관리 사업을 총괄 수행해야 합니다.

1995년부터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인력 1.5만 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 동으로 이뤄진 북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기본과제를 통해 동행정기관의 혁신 뿐만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혁신으로 보건복지, 생활안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북구는 2022년까지 8개 동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에 지속 반영될 수 있는 동별 소요인력 확충과 조례 제정, 자치단체 실시 계획을

통해 지역자원과 주민사업 연계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은 예산문제, 인력확충문제 그리고 법과 제도 개정 문제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별 출산양육, 노인진입가구, 시설퇴소예정자, 고위험 1인 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사업과 자원 지원 등에 심한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이 기본형으로 전환되기까지 일반 동 2~3개를 묶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권역형 복지모델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권역형 책임동의 동장 역할과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권역형 동의 동장·팀장 방문건을 기본형과 비교해 봤을 때 권역형 평균이 기본형 방문건수의 63.5% 정도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동장역할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및 복지에 대한 동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권역형 동장은 일반 동의 동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중심 동 뿐만 아니라 일반 동의 사례 관리 사업을 연계하여 총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도 사례관리에 대해 중심동의 장은 복지팀장을 비롯한 일반 동 복지팀원들과 정기적으로 사례 솔루션 회의를 진행하여 권역형 복지사례 관리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권역형 동장은 일반 동에서 겪고 있는 상담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는 복지콜센터가 복지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형 일반 동의 경우 복지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병행하다보니 행정업무, 전화 상담, 현장방문 등으로 업무량이 과중해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심 동의 장은 일반 동의 복지공무원이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 학대 우려 가구 등을 방문할 경우 안전 확보 방안을 동별 여건에 맞게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 자생단체, 사회복지요원 등 동행할 수 있는 인력확보 계획을 세우고 동별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회 복지직 여성 비율이 72.7%로 일반직 35.4%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권역형 중심 동에는 복지팀이 있어 2인 1조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겠지만 일반 동의 경우, 통합관리 사례사나 복지공무원이 동행 없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복지팀 그리고 동별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불행한 사건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러한 불행을 멈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복지 대상자들에게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확충 전까지 복지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된 현장상담업무와 과중한 복지행정 업무를 중심 동의 동장이 총괄적으로 일반 동의 동장들과 사례 관리, 주민 참여 및 업무분장 회의를 통해 복지공무원에 대한 업무 경감, 따뜻한 격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활발한 주민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청소년, 장애인,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그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는다면 보다 내실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기반 되어야 합니다. 추진 시책을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총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본형으로 전환되는 만큼, 복지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실수로 출입로가 사라진 아파트

농소1동 매곡 404세대가 살고 있는 대하아파트는 1992년 2월 사업승인이 되어, 1993년 7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의 행정에 제출된 사진 자료를 확인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차장, 입구 등 녹지공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은 당연히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까지를 공유면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20여 년간 사용해 온 유일한 출입구는 건설회사의 부도에 따른 체납된 세금으로 2013년 6월, 일부 주차공간 부지는 2014년 9월에 공매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소유주는 뒤늦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준공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되지 않았거나 기부채납 과정에 출입로 및 주차장 대지가 누락되는 등 당시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출입로가 없는 땅 위 아파트에 행정기관이 준공을 해줄 정도의 업무 처리는 하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을 전혀 몰랐고, 지적도 상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 내부에 위치해 사유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파트 입주 전 주차장 및 출입로, 내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확인해 보십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으로 주민의 민원에 대해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용검사 당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토지 소유자들도 공매 당시 아파트 내부 공용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한 만큼 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울주군 시절에 진행됐던 사용허가와 기부채납이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분명 집행부는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계획된 도시 도로가 실효되기 전 도로를 만들던지, 유일한 출입로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한계를 말하기 전에 행정의 실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기부채납한 땅을 집행부가 매입하지 못한다면 복구청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주차장 부지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아파트 입주자 손을 들어줬다고 하나, 계획도로의 부지가 내년 6월 말 실효가 되면 소유주의 개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에 대해서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해 주차장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해당 부지는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의 소유인만큼, 집행부는 아파트 둘레에 설치된 담장과 옹벽 안에 위치해 내부 도로와 통행로, 화단으로 이용된 대지를 원래대로 정상화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엄지의 법칙(Rule of thumb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함에 있어 눈대중, 어림짐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 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짧은 시간만 확인할 수밖에 없거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두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지의 법칙’을 좇는 이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의사 결정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나, 세심히 관찰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충 확인 후 ‘내가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라고 답을 내는 함정에 빠집니다. 부디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엄지의 법칙만으로 주민의 민원을 판단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피라미드 조직에서 상위조직으로 갈수록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혁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혁신은 버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버린 만큼 우선순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과감한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 전결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한군데 더 나가는 것보다 차분히 집중하여 우리 복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다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가능토록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참모의 역할입니다. 역할에 맞는 자리로 기억하시어 계장 같은 국장, 과장 같은 구청장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직급에 맞는 일과 의사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포토의정



2019년 양성평등주간 행사(19.07.05)



북구청장기 한궁대회(19.07.09)



화청경로당 준공식(19.07.09)



강동 산하해변 대청소(19.07.10)



동소농협 주부대학 29기 수료식(19.07.11)



산하해변 물놀이장 개장식(19.07.13)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19.07.15)



스마트워킹 300km 걷기 프로그램 참여(19.07.17)



세계로태권도 국제문화교류단 방문(19.07.24)



노사민정토론회(19.07.26)



잠실공원 리모델링 개장행사(19.07.26)



고현박상진의사 순국98주기 추모제(19.08.15)



2019년 하반기 포토의정



광복74주년 농소1동체육대회(19.08.15)



행락철 피서지대청소(19.08.19)



구·군의원 합동워크숍(19.08.20)



중산초 북구의회 견학(19.08.26)



범주민 책 모으기 운동 발대식(19.08.27)



필승코리아 애국펀드 가입(19.08.29)



송화축제 참가(19.09.01)



고현초 개교기념식(19.09.02)



복구시설관리공단 출범식(19.09.02)



복구의회 의정연찬회(19.09.17)



국공립 신천효성 어린이집 개원식(19.09.20)



사회복지자원봉사박람회(19.09.21)



2019년 하반기 포토의정



19기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출범(19.09.25)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한마음대회(19.09.28)



어린이집 원장 교육 격려(19.09.30)



박원희 5대 북구문화원장 취임식(19.10.01)



북구청장기 그라운드골프 격려(19.10.04)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참가(19.10.13)



오치골공원 준공식 참가(19.10.14)



선배시민문화제(19.10.16)



농소3동 어르신위안잔치(19.10.21)



북구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가(19.10.25)



송정화봉 어르신경로잔치(19.10.27)



머큐어앰버서더호텔 4성 현판식(19.10.29)



2019년 하반기 포토의정



강동동 어르신 한마음큰잔치(19.11.03)



효문동 경로잔치(19.11.05)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학생글짓기대회(19.11.09)



상이군경회 등 4단체 위로행사(19.11.11)



농소2동 주민 4만명 기념행사(19.11.1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격려(19.11.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19.11.20)



사용후핵연료정책 복구 의견 반영 요청 회견(19.11.21)



자원봉사대축제 격려(19.11.28)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주군 유치 불복회견(19.11.29)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격려(19.12.27)



새마을 김장나눔행사(19.12.04)



2019년 하반기 포토의정



직심자 특별회비 전달(19.12.05)



바르게살기 전진대회 격려(19.12.10)



동 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19.12.12)



2019년도 북구의회 총무식(19.12.20)



달천철장 관리시설 개관식(19.12.27)



평생학습관 기공식(19.12.27)

북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북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서비스 내용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접속경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짝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09:00 ~ 18:00(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73 팩스 : 241-8979

| 농소1·강동·송정동 | 효문·양정·염포동 | 효문·양정·염포동 | 농소1·강동·송정동 | 농소2·농소3동 | 농소2·농소3동 | 농소2·농소3동 | 비례대표 |
|--|---|---|---|---|--|---|---|
|  |  |  |  |  |  |  |  |
| 의 장 | 부의장 | 운영위원장 | 의 원 | 의 원 | 의 원 | 의 원 | 의 원 |
| 이 주 언 | 백 현 조 | 임 채 오 | 박 상 복 | 정 외 경 | 이 정 민 | 임 수 필 | 이 진 복 |
| 사무실 : 241-8900 010-9173-4432 | 부의장실 : 241-8910 010-3801-8364 | 사무실 : 241-8920 010-4844-5405 | 2020년 1월 15일 사직 | 사무실 : 241-8950 010-6625-7725 | 사무실 : 241-8940 010-3123-3387 | 사무실 : 241-8930 010-6227-0049 | 사무실 : 241-8990 010-4228-898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